

보도시점 2023. 4. 4.(화) 11:00 배포 2023. 4. 4.(화) 08:30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

- 167명 규모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등 조직개편 11일자 단행 -
- 빠르고 정확한 심사로 우리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뒷받침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금번 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해줌으로써,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진 배경 >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상승효과(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왔고,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추진단 신설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추진내용 >

이번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전담 심사국(추진단) 신설·운영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하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하는 한편,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 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을 신설키로 했다.

* (개편 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 (개편 후) 특허심사 5국 + 반도체심사추진단

<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인력 구성 세부 현황 >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높인다는 복안이다.

② 국(局)단위 기구명칭 변경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총아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 기능에 맞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디지털기반(플랫폼) 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수요자들이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데이터)의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바꾼다.

< 향후 계획 >

이인실 청장은 “작년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특허청의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불임1. 개편 전후 특허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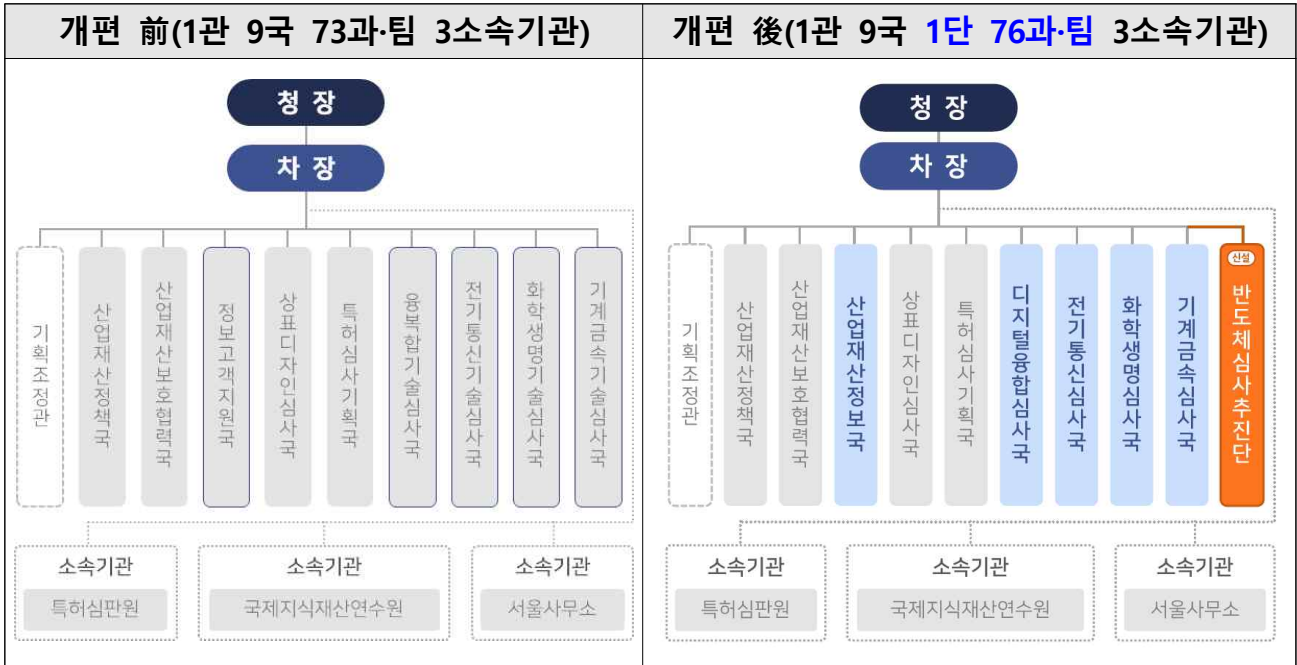
불임2. 그간의 추진경과

특허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진환	(042-481-5051)
		담당자	사무관	박진아	(042-481-5978)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조직진단과	책임자	과 장	이지성	(044-205-2321)
		담당자	주무관	방소정	(044-205-2322)

붙임1

개편 전후 특허청 조직도

< 조직개편 전후 특허청 조직도 비교 >



붙임2

그간의 추진경과

○ ('22.5) 국정과제(04-22)* 반영

*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 기술유출 방지, 현장전문성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

○ ('22.7~11)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증원 추진

* (행안부) 반도체 전문임기제 67명 증원 합의('22.9)
 (기재부) 1차 30명 예산반영('22.11) / 2차 37명 '24년 예산반영 협의(~'23.5)

○ ('23.3)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30명 채용 완료

* 175명 지원(경쟁률 6:1), 석·박사 비율 83%, 반도체 분야 경력 24년 등 우수인력 확보

○ ('23.4)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 등 직제개편 완료

* 반도체심사추진단(국)·반도체심사 3팀 신설, 국 명칭 변경 등